100억대 '딱지어음' 발행 할인 사용

D종합건설 정모 前 회장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7일 100억원대의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은행에서 할인해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남 D종합건설 정모(71) 전(前)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D종합건설의 어음 108억원을 발행, 이를 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은행에서 할인받게 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하도급업체에 대출 보증을 서게 한 뒤 은행에서 24억원을 대출받아 부도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가 운영하던 D건설은 지난 3월13일 부도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거래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자메시지 발송 區의원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천36명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박모(37)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대상자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지지를 호소하는 점으로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협 전·현직 광주본부장 4명

불법자금 조성 혐의 소환조사

광주 동부경찰은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정모(56)씨와 전(前) 본부장 전모(57)·허모(58)·김모(60)씨 등 4명을 17~18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전·현직 광주본부장들은 ▲장부를 조작하거나 '카드깡' 등을 통해 각각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간제 사고심사역 1명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본부장들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도 관례상 인정하는 '부외자금'(簿外資金·장부 없이 이뤄지는 금융거래) 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협 관계자 5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최고 간부급만 입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전현직 본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0억대 '부교재 리베이트' 적발

유명 출판사 광주총판 30여개 중·고교에 책값의 15~20% 제공

광주 서부경찰, 압수수색 영장

유명 모 출판사 광주총판이 자사가 펴낸 국·영·수 과목 부교재를 채택하는 명목으로 광주·전남 수십여 곳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은 모 출판사 광주총판이 30여 개 중·고교 교사에게 권당 가격이 1만~2만원 선인 부교재를 채택도록 하고 그 대가로 책 가격의 15~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혐의를 잡고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기 초 교사가 부교재를 선택하면 출판사 영업 사원이 학교에 찾아와 리베이트를 건넸다"며 "이 대금은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감·교장 등이 미리 받아 교사들에게 건네주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내 한 대형 서점의 중·고등학교 부교재 코너.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관행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 출판사 광주총판은 광주·전남 지역 부교재 시장에서 세 번째로 점유율이 높으며 ▲2004년 100억원 ▲2005년 8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총판의 매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연간 1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출판사 총판의 경우 여러 명의 영업 사원을 두고 광주 등지의 학교를 상대로 마케팅을 벌여왔다"며 "일반 입시 학원들과의 계약도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출판사들도 일선학교 교사들과 학원 측에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택비'는 각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부교재로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채택하는 대가로 부교재 값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계의 오래된 불법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또 출판사에서는 교사들에게 지급할 돈을 감안,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교재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일부 교사가 부교재 채택비를 교감·교장에게 상납하는 등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년 중 '부교재 채택료 거부 및 가격 인하운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특정 학습지를 구독하는 학교와 규모 등 실태 파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지방세 체납 압류車 전산조작 후 수출

공무원·매매상 등 3명 영장

순천경찰 수사 확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치단체에 압류된 차량을 전산망에서 일시 압류 해제한 뒤, 이를 동남아시아지역 등에 수출해 온 자동차매매상과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18일 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전산망을 통해 압류 차량을 일시 해제해 주고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각각 1천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천시청 공무원 김모(45·기능 9등급)씨와 시청 공익요원 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인천 K중기 매매상사 대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전산망을 통해 자치단체 등에 의해 압류 처리된 덤프트럭의 압류를 일시 해제해 준 뒤, 차량 수출이 가능한 등록 말소증을 교부해줬다. 또 그 대가로 자동차 매매상인 김씨에게 1대당 100만~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박씨도 지난해 8월부터 김씨에게 1천600여만원을 받고 전남 07나10 XX호 덤프트럭 등 24대의 차량의 압류를 일시 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기 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김씨는 전국을 상대로 압류된 차량을 저가에 구입한 뒤 차량등록사업소 전산망을 통해 일시적으로 차량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매상 김씨가 인천항을 통해 이들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출 대수 등을 파악 중이며, 무역상사와 다른 자동차 매매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이준기 "초상권 침해" 1억원 손배소

○…영화배우 이준기〈사진〉씨가 18일 MP3 업체인 K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이씨는 "2004년 9월 K사와 출연료 500만원에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으나, K사가 이후에도 원고 허락없이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

○…이씨는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한 이후 CF 출연료가 2억원까지 치솟는 등 선전 가치성과 피고의 불법광고에 따른 매출 증가를 고려할 때 배상액은 최소 1억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 /연합뉴스